

농어촌 빈 집은 늘고 ... 귀촌인 살 집은 없고

인구 감소, 고령 인구 증가에 허덕이는 전남도와 시·군이 도처에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보다 적극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빈집은 갈수록 증가하며 농어촌이 황폐해지고 있으나 도시민들은 살 곳이 없어 귀농·귀어·귀촌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실 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3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경우 지자체가 이를 매입해 공매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빈집을 농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중요자산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되면서 빈집 역시 크게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1만1357동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7년 9645채, 2018년 8399채 등에서 2000채 이상 증가한 수치다. 1만1357동 가운데 철거 대상은 6911채, 활용 가능 대상은 4446채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최근 5년간 84억4000만원을 투입해 6667동을 철거했다. 전남도와 21개 시·군은 올해 18억6900만원을 들여 1407동을 철거할 예정이다.

전남, 고령화에 인구 급속 감소... 지난해 빈 집 1만1357동
상속 받은 타지역 거주 자녀들 미래 가치 상승 기대로 보유
3년 이상 방치 댄 지자체 매입·공매해 농어촌 활력 높여야

거에 그치기보다 향후 이용 방안까지 세심하게 고려한 빈집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의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으나, 도시민들이 살 곳을 찾지 못해 임시로 귀농·귀어·귀촌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

다. 전남의 인구는 지난 2017년 1월 190만 2380명에서 186만4712명으로 3만7000여 명이 감소한 반면 세대수는 84만2479세대에서 87만2739세대로 3만여 세대가 오려 증가하고 있다. 농어촌에서 1-2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살만한 빈집을 갈수록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어촌의 경우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가고 싶은 섬, 어촌뉴딜 300, 농산어촌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이 계속되면서 타지에 거주중인 소유주들이 미래 가치 상승 등을 이유로 빈집을 소유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고령의 부모가 거주한 뒤 사망하면 타지의 자녀들이 상속 받는 경우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예정이어서 선제적인 빈집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구축 국가균형발전 실현해야”

호남권 국회의원 당선인들, 건의문 서명 청와대 등에 전달

호남권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23일 국회 광장에서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구축 건의문을 발표하고 청와대·국무총리실·국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이를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호남권 당선인 28명 전원이 서명했다.

당선인들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 문희상 국회의장은 물론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등을 잇달아 만나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관련기사 3면>

이런 가운데 6조7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을 놓고 4개 권역(나주·정주·포항·춘천)에서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며 최종 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호남권 당선인들은 이날 건의문에서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에 있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최적 입지 여건을 강조하고, '지리적 접근성'에 높은 점수를 부여토록 한 평가항목과 관련,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평가지표를 재조정하도록 촉구했다.

이들은 "4세대 방사광가속기 이용 대상을 국내로 한정해 '수도권 접근성'을 평가한 것도 오류"라고 지적한 뒤, "정부는 인근 지역의 유사 연구시설과의 중복설치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기득권, 성장제일주의, 수도권 특정 지역 편중 등 구시대적 패러다임은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 등 국가발전의 모멘텀이 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 국정 목표인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선인들은 "호남권에 국가 대형연구시설이 단 한 곳도 없고 대다수가 충청 영남권에 편중돼 있으며, 국가 지원 등 총연구개발 투자예산(R&D사업)도 호남권은 전국 최하위인 3% 수준"이라며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은 굳어진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실마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건의문 발표 현장을 찾아 "호남권은 안정적인 기반과 미래 확장 가능성 등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췄다"며 "대한민국에 노벨상을 안겨줄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위해 호남권 600만 시민들이 톨푼 땀겨워 성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차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유치 의향서를 제출한 지자체는 전남 나주, 충북 정주, 강원 춘천, 경북 포항 4곳이며 정부는 오는 28일까지 실무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다음달 7일 우선협상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성 햇녹차 수확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농촌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어려워진 가운데 23일 오전 보성군청 직원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호천면 녹차밭에서 햇녹차잎 수확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18 40주년 기념식 5·18묘지서 최소 규모로 진행된다

5월 3단체, 보훈처에 제안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정부기념식'이 역대 최소 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7면>

23일 5월 3단체(5·18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3단체 회장단은 국가보훈처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0주년 기념식을 최소 규모

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달 먼저 열린 '제72주년 제2 4·3 희생자 추념식'과 '제60주년 4·19 혁명 기념식'이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열린 것에 따른 결정으로 분석된다.

5월 3단체는 제2 4·3 희생자 추념식과 4·19혁명 기념식이 150-200명의 인원으로 참석할 가운데 열린 사실을 토대로, 이번 5·18 40주년 기념식도 비슷한 수준의 참석

인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기념식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코로나19 확산이 감소세에 들어간 점 등을 고려해 추후 참석 인원이나 행사 규모를 추가로 늘려달라는 요청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훈 5·18 유족회장은 "올해 40주년 5·18정부가 기념식이 옛 전남도청에서 성대하게 치러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축소돼 안타깝다"면서 "행사보다는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우선이다"고 말했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메르세데스-벤츠가 또 한 번, 새롭게 보증하다

완전히 새로워진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Mercedes-Benz Certified

www.mercedes-benz-certified.co.kr

- 국내 수입차 최대 21개 전시장 보유
-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증대
- 국내 최초 세계적인 품질 평가기관 TÜV 검수 및 인증 완료
- 1년 / 2만km 무상 보증 수리 프로그램 (1년 / 2만km 선드래 적용)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